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



최 성 해 |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단국대학교 상경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Temple University MBA를 수료하였으며, Bap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에서 신학사 및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미국 Fort Dix Baptist Church 부목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산업제어기술원 이사장, (사)영주FM방송 이사장, 학교법인 경천교육재단 이사,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교수평가와 연봉제』 등이 있다.

한미 FTA 협정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FTA 즉,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이론적으로는 협정을 맺는 국가 간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무역 창출(trade creation) 효과나 무역 전환(trade diversion) 효과 등이 나타나게 되어 경제 성장도 함께할 수 있고 양국의 소비자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왜 이 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도외시키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동등한 정도의 경제력과 대외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양국의 상법(商法)이나 언어가 가지는 위상이 세계적으로 동등하다면 이론에서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상법이나 관습도 거의 미국 일변도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영어에 능통한 국제 통상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역 분쟁이나 소송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인디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law)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유난히 법률가 출신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간에 무역 분쟁이나 소송이 벌어질 경우, 미국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옆의 캐나다도 이기기 힘들니 우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국어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 우리의 6학년 이상의 수준으로 보인다. 수학이나 과학의 수준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미국이 유독 언어 영역만큼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신경 쓰인다. 사실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이다. 심선 사건 등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팔을 쫓아라고 해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FTA는 결코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니다. FTA가 자유무역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다른

목적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월드컵에 온 나라가 매달리게 한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많다. 공교롭게도 FTA 협정 기간과 맞물려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적이라는 점이 항상 우려스럽다. 교육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언젠가 중요한 교육 세미나를 갔는데 “곧 장관님께서 오시니 빨리 끝내야 된다”고 사회자가 발표자들을 중용하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자문해 본다. 우리에게 교육 이데올로기는 있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진정으로 교육철학이 있는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교육정책도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에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철학을 가지기를 권고하고 싶다. 정치권력의 변화에 춤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지고 그것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만연한 우파적 신자유주의 또는 좌파적 시장 사회주의로 인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부모가 지도하기가 어려워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음악, 미술, 체육도 과외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또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망국적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면 답답하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현실을 무시하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소외받게 된다.

현행대로 간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전체 학생들의 작게는 5%, 크게 잡아도 30% 정도를 제외하면 수학이나 과학은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안학교들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대학교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대학들은 대부분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학생 부족이 1차 원인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치적 원인도 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아는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은 마치 ‘한계 기업’과 같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학 경영자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과 단위로 마치 ‘독립연맹왕국’처럼 되어 있어 비효율과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데, 정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적이라는 점이 항상 우려스럽다. 교육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철학을 가지기를 권고하고 싶다. 정치권력의 변화에 춤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지고 그것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회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효율화를 강요하면서도 사학의 경영자들의 입지를 더욱 크게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에서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의 과정에서 내부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재정 여건이 좋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미국과 같이 기부문화가 성숙되어 있다면 대학경영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에 내·외부적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미국의 경우, 각종 협의회나 이사회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시 기능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만약 현재와 같은 사정하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학법이 최종 확정된다면, 지방 대학이 바로 서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의 하락과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학법도 순수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겠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 교육이 튼튼해야 이 나라 교육도 건실해진다. 지방 교육이 무너지고서 수도권만 비대해진 교육을 가지고

이 나라 교육이 온전하겠는가? 팔 다리가 없이 머리만 비대해진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정부는 지방의 교육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보다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교육부에서만이라도 정치성을 좀 탈피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의 종속변수가 되면, 당장은 정치가들에게 이로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발목을 잡는 괴물로 둔갑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철학을 가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지방 교육이 튼튼해야 이 나라 교육도 건실해진다. 지방 교육이 무너지고서 수도권만 비대해진 교육을 가지고 이 나라 교육이 온전하겠는가?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 교육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

